

# 2020년 제12회 국제법 모의재판 경연대회 문제

## 침략행위의 결정과 침략범죄에 대한 절대적 보편적 관할권 행사가능성 (Naradon v. Agoria)

1. Agoria국(Federal Republic of Agoria)은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연방국가로서 국토면적이 약 20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1억 5천만 명의 국가이다. Agoria국은 의회민주주의에 기초 하면서 국민의 70%가 기독교를 신봉하는 민주주의 국가이며, 1인당 국민소득이 5만 달러를 넘는 OECD회원국이다.

2. Doppstan국(Democratic Republic of Doppstan)은 Agoria국의 남쪽 국경선 이남에 인접하여 있는데, 국토면적 약 4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2천만 명의 이슬람국가로서 역시 의회민주주의를 표방하는 국가이다. 국민의 95% 이상이 온건한 이슬람교를 믿고 있는 Doppstan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6천 달러가 채 안 되는 개발도상국이다.

3. 한편 Naradon국(the Kingdom of Naradon)은 왕정국가로서 Doppstan국의 동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국토면적은 120만 평방킬로미터, 인구 약 8천만 명의 국가로서 Doppstan국과 마찬가지로 그 국민의 98% 이상이 온건한 이슬람을 신봉하는 이슬람국가이다. Naradon국은 세계 제1위의 산유국일 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 금 등 광물자원도 풍부한 국가로서 1인당 국민소득이 4만 달러가 넘지만 OECD회원국은 아니다. Naradon국은 오래전부터 Doppstan국과 동일한 종교를 통하여 연대감을 함께 하면서 최고의 우호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1985년에는 양국 간에 상호방위조약을 맺은 Doppstan의 동맹국이기도 하다.

4. Doppstan의 국가원수인 Hassani 대통령은 지난 30년간 권좌를 유지하면서 독재정치를 계속하여 왔다. 그 결과 Doppstan국의 정부관리들은 부패하게 되었고, 경제사정은 점차 악화되어 갔다. 이에 Hassani 정권에 반대하는 군중들의 집회가 늘어났다. 그러던 중 2016년 6월 10일 최초로 국민 100만여 명이 넘는 군중집회가 열려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였다. 그 이후 Hassani 독재에 항거하고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점차 고조되었다.

5. 2016년 7월 4일 Doppstan 국내에서의 민주화운동이 최고조로 격렬해지자, Hassani 정권은 군대를 동원하여 국민들에게 발포를 하였고, 이후 수개월 동안 Hassani 군대에 의한 무자비한 인권유린이 자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폭압과 인권말살을 피해 Doppstan국 국민 약 50만명이 주변국가로 피신함으로써 대규모 난민이 발생하는 사태도 나타났다. 이로 인하여 전 세계의 여론이 들끓자, Agoria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이러한 사태에 우려를 표시하였다. 그 해 11월 10일 UN 안전보장이사회(이하 “안보리”라 함)는 UN헌장 제39조에 기초한 결의 제3000호를 통해 Doppstan국 내의 사태를 “평화에 대한 위협”으로 결정하고 Doppstan국에게 이러한 사태를 조속히 종식시킬 것을 촉구하였다. 그 후 Agoria국은 이러한 사태에서 인도에 반한 죄와 전쟁범죄를 저질렀다고 여겨지는 Hassani 대통령을 처벌하기 위하여 국제형사재판

소(ICC)에 이 사태를 회부하자는 결의안을 안보리에 제안하였지만, 일부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로 채택되지 못하였다.

6. Doppstan국 군대와 민주화운동을 벌이는 국민들이 조직한 저항(반란)단체들 간의 무력충돌이 격렬해진 어수선한 틈을 이용하여 반란단체 중 하나가 Doppstan국 북동부지역에서 약 4만 평방킬로미터(전 국토의 약 10분의 1)의 지역을 장악하였다. 2017년 3월 30일 이 반란단체는 스스로를 이슬람 원리주의를 추종하는 알코란국(Alcoran State) 또는 “AS”라고 칭하면서 독립을 선포하였다. 그러나 UN회원국 중 어떠한 국가도 이를 국가로서 승인하지 않고 있다.

7. 동년 4월 30일 이후 AS는 주변국인 Agoria국, Doppstan국, Naradon국에 대하여 1~2개월 간격으로 대상 국가를 바꾸어 가면서 대상 국가 내에서 소규모의 테러와 약탈을 자행하였다. 이에 주변국 3국은 AS를 테러단체로 지정하였고, 특히 Doppstan국은 동년 9월 7일 국내법으로 “테러방지법”을 제정하여 AS의 진압과 제거에 온 힘을 다하였으나, AS의 완강한 저항에 밀려 AS장악지역에 대해 통제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8. 이러한 상황 하에서 동년 12월 12일 Doppstan국은 AS를 퇴치·제거하기 위해 주변국인 Agoria국과 Naradon국에게 Doppstan과의 조율 하에 AS를 공습해 주기를 요청하였다. 그러나 Agoria국은 Doppstan국과 함께 공습에 참여하는 것은 Doppstan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인권유린사태를 묵인·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하에 Doppstan국으로부터의 협력·공조 요청 또는 조율 요청을 계속 거부하여 왔다.

9. 그러자 Doppstan국의 외무장관은 그해 12월 25일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하였다.

“우리 Doppstan국 정부는 우리나라 영토 내에 존재하는 테러조직인 AS의 진압, 퇴치 및 제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렇지만 외국이 Doppstan국 영토의 일부인 AS장악 지역을 공습하는 경우에는 Doppstan국과 사전 조율이 필요하며, 그렇지 않은 공습은 우리 Doppstan국에 대한 침략으로 간주될 것이다”

그 후에도 Doppstan국 정부는 여러 번 기회가 있을 때마다 Doppstan국 정부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모든 종류의 조치는 Doppstan국에 대한 공격이 될 것이라고 경고하여 왔다.

10. 한편 Doppstan국과 상호방위 태세를 확립하고 있는 Naradon국은 Doppstan국의 공습 요청에 응하여 Doppstan국과의 조율 하에 AS에 대한 공습을 하여 왔다.

11. 2018년 2월 26일 AS가 Agoria국의 수도를 비롯한 전국 10개 도시에 미사일 200여기를 발사하는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여, 군사시설 및 민간인 시설을 대파하였고, 이러한 공격으로 군인 450명, 민간인 500여명이 살상되었다.

12. 2018년 3월 5일 안보리는 결의 제3003호를 채택하여, “AS의 대량의 미사일 발사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전에 대한 전례 없는 위협에 해당한다. … UN회원국들에 대하여 AS의 통제 하